

ESG Handbook

Basic

Social

Gover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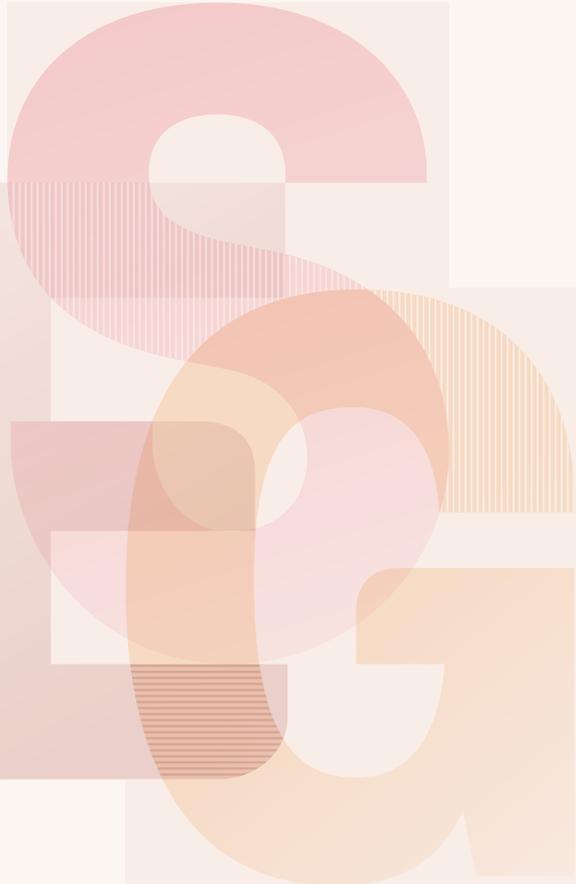
Environmental

CSES

사회적가치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ESG Handbook

Basic



ESG Handbook Basic을 펴내며

2021년을 시작하며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에서 ESG에 관한 첫 발간물로 “ESG Handbook Basic”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SV, social value) 창출의 중요성과 더불어, 기업 경영과 투자 분야에서 환경(E)·사회(S)·거버넌스(G)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ESG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생소한 용어들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ESG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입문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ESG Handbook Basic은 이제까지 ESG 생태계가 어떤 주요 기관과 글로벌 이니셔티브들로 형성되어 왔는지, 2021년을 시작하며 반드시 챙겨야 할 ESG 동향은 무엇인지, 영문 두문자어로 구성된 수많은 ESG 분야 용어 중 필수 정보는 무엇인지를 선별하여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ESG를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ES에서는 지난해부터 매월 2회씩 GST(Global SV Trend)를 통해 최신 ESG 동향을 전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ESG와 SV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발간 작업에 참여해 주시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사회적가치연구원장 **나석권**

Interactive PDF 사용자 가이드

ESG Hadbook Basic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Interactive PDF로 제작되었습니다.

표지나 목차, 이전/이후 페이지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며, 외부 웹사이트로도 연결됩니다.

 클릭하시면 본 책자의 표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클릭하시면 본 책자의 목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직전의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클릭하시면 현재 페이지의 이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클릭하시면 현재 페이지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이니셔티브/기관의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1장에서는 우측 상단의 CI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목 차

들어가며 06

I	ESG 생태계에 대한 이해	08
	1. 글로벌 표준화 기관	12
	2. 주요 프레임워크	16
	3. 투자자 이니셔티브	23
	4. 자본시장 데이터 제공 기관	30
	5. 기타 이니셔티브 및 기관	38

II	2021년 ESG 동향 전망	46
	1. 해외 8대 ESG 동향	50
	2. 국내 8대 ESG 동향	61

III	ESG 용어 정리	72
	1. 주요 용어	76
	2. 이니셔티브 및 기관	88

색인 102

들어가며



2021년은 ‘ESG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래리 핑크 회장의 연례 서한 메시지가 화제입니다. 2020년에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이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제임을 선언하며 ES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2021년에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장기 전략 공개를 요구하고 양질의 ESG 정보 공시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ESG 이행을 가속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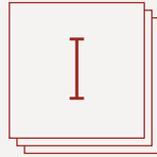
ESG와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담론 또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9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성명서를 시작으로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천명한 ‘다보스 매니페스토 2020’에 이어, 2021년 1월 ‘다보스 어젠다 2021’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성장(progress), 사람(people), 지구(planet)’의 세 축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2020년을 지나며 ‘그린’은 모두의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2019년 새로 출범한 EU 집행위원회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한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은 2021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본격적인 적용,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탄소중립과 넷제로(net zero)에 대한 전 세계 정부 및 민간의 정책적 노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제시하며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게 ESG는 완전히 생소한 이름은 아닙니다. 지속가능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지난 30년 간 CSR 관련 글로벌 연성규범(soft law), 유엔기후변화협약(1992)부터 교토의정서(1997)를 지나 파리기후변화협약(2015)으로 이어진 기후변화와 환경 어젠다는 기업과 사람, 지구라는 세 축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촉진시킨 촉매제였습니다. 다양한 국제기구와 이니셔티브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와 측정, 평가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 추진 동력이었습니다. ESG가 단기 유행에 그치지 않고 강화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지속가능경영은 또 한 번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ESG 동향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정보 공개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여러 기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고, 환경(E) 뿐만 아니라 사회(S)와 거버넌스(G) 분야 정책의 큰 틀이 또 한 번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ESG가 기업 경영과 투자의 핵심 척도로 한 단계 더 나아갈지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볼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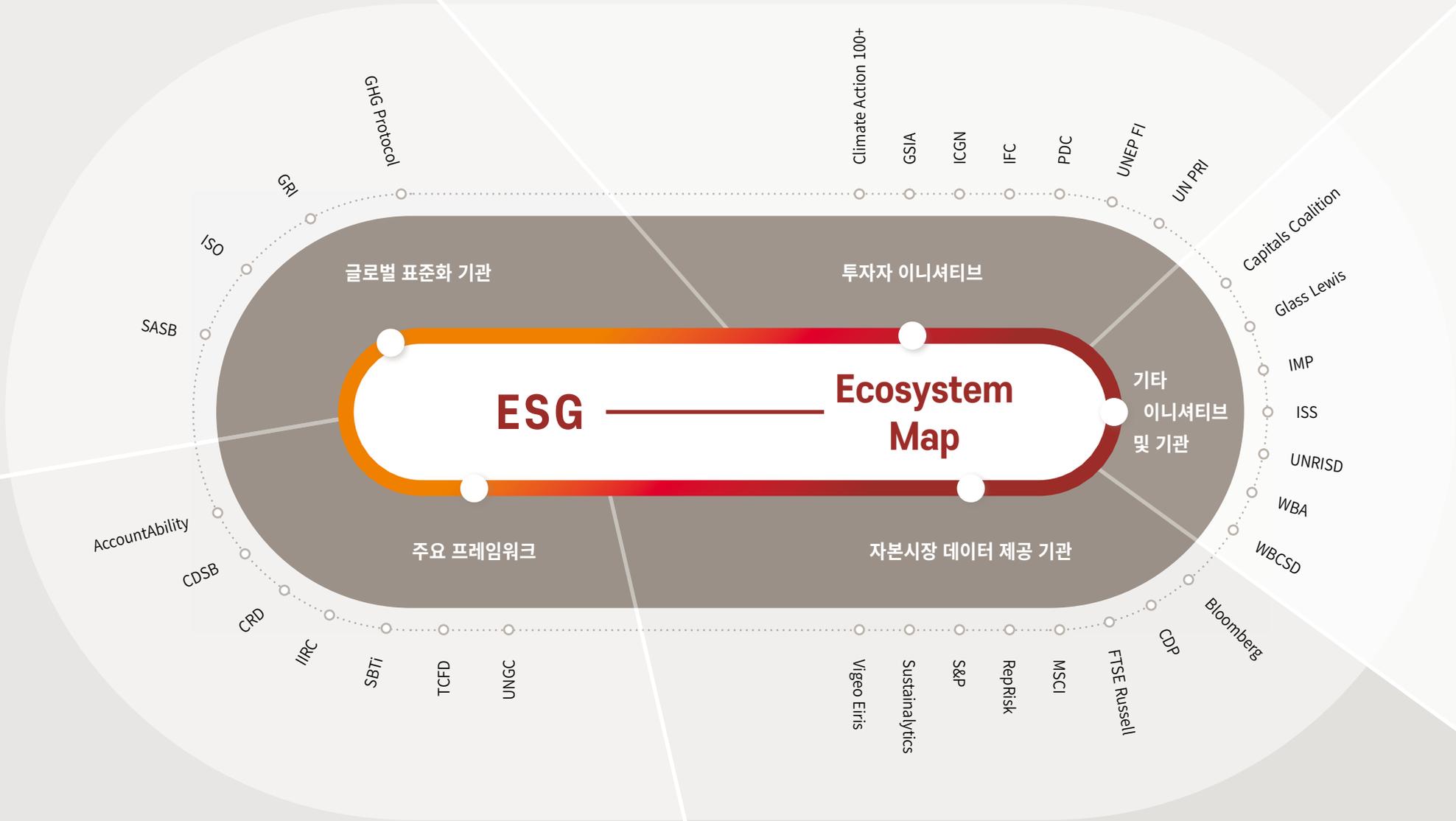


ESG 생태계에 대한 이해

2019년 8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복잡한 ESG 생태계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투자자, 기업 및 기타 관련 주체들로 구성된 ESG Ecosystem Map을 개발했습니다.

I장에서는 이 Ecosystem Map을 ESG 생태계에 관한 기본 가이드로 참고하여 현재 및 향후에 국내에서 유의미한 글로벌 기관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합니다.

- 1. 글로벌 표준화 기관 12
- 2. 주요 프레임워크 16
- 3. 투자자 이니셔티브 23
- 4. 자본시장 데이터 제공 기관 30
- 5. 기타 이니셔티브 및 기관 38



1. 글로벌 표준화 기관

1

GHG Protocol (Greenhouse Gas Protocol)



GHG Protocol for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일명 GHG Protocol(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은 1997년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에서 설립하였다. 1998년부터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해 보급하고 있다.

GHG Protocol 기업 표준(Corporate Standard)은 2001년 처음 마련되었으며, 이후 기업이 전기 및 기타 에너지 구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을 측정하고 가치사슬 전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을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추가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비재무정보 공시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표준으로, 2016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Fortune)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평가를 받은 기업의 92%가 GHG Protocol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였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X	X	✓	X

2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비영리기구로, 1997년 미국의 환경단체 세레스(CERES,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와 유엔환경계획(UNEP)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했다.

GRI의 핵심은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이며,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2000년 발표된 GRI Guidelines(G1)은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최초의 글로벌 프레임워크다. 이후 가이드라인은 G2~G4로 이어지며 확대 및 개선되었다. 2016년, GRI는 최초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 Standards를 제시했으며,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GRI Standards는 경제 분야 6개 주제, 환경 분야 8개 주제, 사회 분야 19개 주제 등 광범위한 주제별 영향 보고를 위한 세부 지침과 글로벌 우수사례를 제시한다. 보고 대상은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된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15,402개 조직이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	X

1. 글로벌 표준화 기관

3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국제표준화기구)가 2010년 발표한 ISO 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글로벌 빈곤과 불평등,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위기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면서, 2004년 ISO에서 표준 개발이 결정되었고, 2005년부터 5년에 걸쳐 개발되었다. 소비자, 정부, 기업, 노동, NGO 및 기타 등 6대 다자간 이해관계자 접근방식으로 참여한 90여 개국 이상의 전문가가 이를 개발하였다.

ISO 26000은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등을 7대 핵심 주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지침과 권고사항 등을 담고 있다.

ISO 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분야에서 참고가 되어 왔으나, ISO 9000(품질경영시스템)이나 ISO14000(환경경영시스템)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실행 가이드라인으로 인증을 위한 표준이 아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기관과 기업은 적용에 있어 제각기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X	X

4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는 2011년 설립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할 기업의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투자자들에게 비교 가능한 비재무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산업별로 중요한 ESG 이슈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SASB는 2018년 77개 산업별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을 발표하였으며, 각 산업별 중대이슈(materiality)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GRI밖에 없었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시장에 뒤늦게 등장했지만, 재무적 성과와 연계된 ESG 요소를 중심으로 간결한 세부지침이 만들어져 투자자들에게 빠르게 수용되고 있다. 현재 지속가능성 보고에 있어서 GRI와 함께 가장 널리 채택되며, 특히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 회장이 2020년 SASB 기준과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기준 보고서 공시를 요구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2020년 11월, IIRC(국제통합보고위원회)와의 합병을 선언하였고, 두 기관은 2021년 중반까지 Value Reporting Foundation이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여 보다 종합적인 기업 비재무정보 공시 표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	X

2. 주요 프레임워크

1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는 1995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기업들이 발행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제3자 검증(assurance)을 위한 글로벌 표준 개발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AccountAbility는 전 세계 10여 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검증(assurance)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국제 표준인 AA1000 시리즈를 개발했다. AA1000AP(보고서 검증 원칙), AA1000AS(보고서 검증절차 표준), AA1000SES(이해관계자 참여 표준)로 구성되어 있다. AA1000 시리즈는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ISAE3000과 함께 전 세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사후 검증에 가장 많이 활용돼 왔다.

2021년 1월 현재 AccountAbility는 검증 표준을 업데이트한 AA1000AS v3를 발표하였다. 검증기관 자격 기준이 엄격해졌고, ‘포괄성(Inclusivity)’, ‘중대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으로 대표되었던 AA1000AS 3대 원칙에 ‘임팩트(Impact)’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검증기관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해당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사회 및 환경 영향이 측정 및 모니터링되고 있는지에 관한 검증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X	X

2

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는 2007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기후 변화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컨소시엄 조직이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와 미국의 환경단체 세레스 (CERES),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 국제배출권거래 협회, WBCSD, 세계경제포럼, 세계자원연구소(WRI) 등이 이사회를 구성했다.

2010년 CDSB 정보공개 프레임워크 초안을 발표했고 2018년까지 업데이트 하였으며, 현재 32개국 374개 기업이 CDSB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보고사항으로는 기후변화 전략, 위험과 기회 요소, 온실가스 배출 등이 담겨있다. CDSB는 기업이 재무정보 공시 수준으로 환경 정보를 엄격하게 보고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2020년 9월 CDSB와 GRI, SASB, IIRC, CDP 등 주요 5개 기관이 협력해 비재무정보 공시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2월에는 5개 기관 표준·프레임워크의 특정 구성요소와 TCFD 권고사항을 함께 분석하여 통합된 글로벌 표준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X	X	X	X

2. 주요 프레임워크

3

CRD (Corporate Reporting Dialogue)



CRD는 2014년에 IIRC(국제통합보고위원회)에서 조직한 글로벌 비재무정보 공시 표준 제정 기관들의 공식 협의체로, 현재 CDP, CDSB, FASB(미국 회계기준 위원회, 오피버), GRI,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IIRC, ISO, SASB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Better Alignment Project를 통해 각 기관별 공시 기준 및 지표 간의 차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2019년 9월, 보고서 <Driving Alignment in Climate-related Reporting>을 발간하여 CDP, CDSB, GRI, IIRC, SASB 등 5개 주요 기관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및 프레임워크를 TCFD 권고안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2020년 12월 5개 기관이 낸 프로토타입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인 TCFD 기준에 따라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매트릭스(측정 지표) 및 목표를 프레임워크의 전체 틀로 가져왔다.

CRD는 이러한 협업을 통해 비재무성과가 재무성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재무보고와 비재무보고의 통합을 지원하고자 한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X	X

4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국제통합보고위원회)는 기업 재무정보 뿐 아니라 ESG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제정하고자, 지속가능성회계프로젝트(The Prince’s Accounting for Sustainability, A4S)와 국제회계사연맹(IFA), GRI에 의해 2010년 설립된 조직이다. 전 세계 규제 당국, 투자자, 기업, 표준 제정기구, 회계 전문가 및 NGO 등이 참여했다.

IIRC에서는 2013년 통합 보고(Integrated Reporting)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는데, 이는 재무보고서와 지속가능보고서를 하나로 합친 개념이다. 통합 보고서는 전통적인 재무자본과 제조자본 외에도 지식자본, 인적자본, 사회·관계 자본, 자연자본 등 6가지 자본의 개념을 제시한다. 즉, 이는 실물자본뿐 아니라 무형자본까지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본에 대한 회계책임(Accountability)과 수탁책임(Stewardship)을 높이고, 단기·중기·장기적인 가치창출에 중점을 둔 보고 프레임워크다. 현재 네슬레, 바스프, 다농 등 70개국 2,500개가 넘는 기업이 통합보고를 하고 있다.

IIRC는 2020년 11월 SASB와의 합병을 선언했고, 2021년 Value Reporting Foundation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X	X

2. 주요 프레임워크

5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는 2015년 CDP, UNGC, WRI, WWF(세계자연기금) 등의 파트너십으로 설립되었다. 산업화 수준 대비 지구 온도 상승폭을 2°C 이하로 억제하고, 1.5°C 이하까지 줄이자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과학에 기반해’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침과 방법론을 제공한다.

기업들이 SBTi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로 약정서(Commitment Letter)를 제출하면 ‘Committed’ 단계로 인정된다. 이후 SBTi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준을 충족하는 목표를 설정해 제출하면, SBTi에서 해당 목표의 유효성 여부를 검증하여 승인한다. SBTi에서 승인한 이후에는 기업명과 감축 목표가 SBTi 웹사이트에 공개되며, 기업 차원에서도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 중기(2030년), 장기(2050년) 절대치 및 원단위 목표 수립이 필요하며, 목표 공개완료까지 약 24개월이 소요돼 장기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 1,15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DGB금융그룹, SKT, SK증권, 신한금융그룹이 약정서를 제출한 ‘Committed’ 단계이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X	X	✓	X

6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는 기후변화가 미치는 기업의 재무적 영향 공개를 위한 프레임워크 및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설립한 FSB(금융안정위원회)에서 2015년 발족한 태스크포스다.

2017년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TCFD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TCFD 권고안은 크게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권고안 및 지침, 시나리오 분석의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중 권고안 및 지침은 거버넌스/전략/리스크 관리/정량적 지표 및 목표 등 4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정보공개를 권고한다.

2021년 1월 기준 전 세계 77개국 1,700개 이상 기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TCFD 권고안 기준 공시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으며, 스위스에서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의 TCFD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환경부와 한국거래소, 주요 금융지주,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 민간기업 약 10여 곳이 지지를 선언했으며, 2020년 주요 기업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적용하면서 GRI, SASB와 같이 공시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TCFD 참여가 활발했으나, 최근 비금융산업의 가입도 증가하고 있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X	X	✓	X

2. 주요 프레임워크



7

UNGC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코피 아난(Kofi Annan) 전(前) UN 사무총장의 주도로, 2000년 7월 출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기업 활동에 있어 인권(Human Right), 노동 기준(Labor Standard), 환경(Environment) 및 반부패(Anti-Corruption)에 관한 10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1948),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1998),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1992), 유엔 반부패협약(2003)에서 유래하였다.

회원사들이 이 원칙들을 기업 운영 및 경영전략에 내재화하여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하도록 권장한다.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포괄적인 유엔의 목표 달성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57개국 14,000여 개 회원사(11,000여 개 기업회원 포함)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국내 기업의 가입과 참여를 담당하고 있다. 회원사로 가입하면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등 일정한 혜택이 주어지며, 매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에 이행보고서(COP)나 참여보고서(COE)를 제출해야 한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X	X

3. 투자자 이니셔티브

1

Climate Action 100+



Climate Action 100+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달성을 위해 2017년 결성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니셔티브다. 블랙록(BlackRock),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등 545개 이상의 투자자들이 협력하기로 서명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자산규모는 52조 달러에 이른다.

CA100+의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며, 기후 관련 금융공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2021년 1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전 세계 167개 기업에 서한을 보내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순배출량 0)에 도달하는 방안과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엑손모빌, BP, 아람코, 로열더치셸 등 글로벌 석유기업을 비롯해 코카콜라, 포드, GM, 월마트 등이 포함돼 있다. 국내 기업 중에는 한전, 포스코, SK이노베이션이 있다. 이들 167개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80%에 해당한다.

2021년 1분기에 'CA100+ Net Zero Company Benchmark'를 도입해 기업별 배출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기업들의 배출 저감 활동을 평가할 예정이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X	X	✓	X

3. 투자자 이니셔티브

2

GSIA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GSIA(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는 2014년 유럽,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투자연합 기관들이 함께 설립한 조직으로, 멤버십을 바탕으로 상호 간 네트워크와 협력 강화, 공동의 이니셔티브 수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기능해왔다.

GSIA는 ESG 투자 방법론을 7가지 하위 부문으로 구분해 제시한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포지티브 스크리닝, 규범 기반 스크리닝, ESG 통합, 지속가능 테마 투자,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기업관여활동 및 주주행동 등이 그 방법론이다.

투자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술, 담배, 무기 등과 같은 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 하던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에서, 1990년대 이후로는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이는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식으로 변화했다.

최근에는 투자목적 설계, 포트폴리오 비중 선정 등 투자 의사결정 전반에 ESG 요소를 적용하는 ‘ESG 통합(integration)’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12년부터 2년마다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규모를 발표하는 GSIR(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를 발간하고 있다. 전 세계 지속가능투자 규모는 2012년 13.2조 달러에서 2018년 30.7조 달러로 급증했고, 2020년 상반기 40.5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X	X

3

ICG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ICGN(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연구를 위해 1995년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로,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학계, 기업, 정부기관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지닌 기업지배구조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기관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10년 이상 주주행동주의에 관한 경험을 쌓은 것이 ICGN 설립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ICGN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와 이슈를 교류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하며,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관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2016년 도입한 국내 스톡어십십 코드도 ICGN의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연기금과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글로벌 금융사들도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사인 45개국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자산규모는 2021년 현재 54조 달러에 이른다.

전(前)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인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2019년 ICGN 이사로 선임돼 6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X	X	✓	X	X

3. 투자자 이니셔티브

4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국제금융공사)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민간기업에 투자하는 유엔 산하 금융기관으로 1956년 설립되었다. 2005년 'Who Cares Wins' 컨퍼런스 보고서 <Investing for Long-Term Value>에서 ESG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사용하였다. 같은 해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2006년 UN PRI(유엔책임투자원칙)를 통해 자본시장에 ESG 요소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가속화되었다.

세계 최대 개발금융기관인 IFC는 2003년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3장 참조) 이외에도 ESG 성과 및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러 표준 및 원칙을 개발하였다.

-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과 표준(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2012): IFC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 책임을 규정하였다.
- 임팩트 관리를 위한 운영원칙(Operating Principles for Impact Management, 2019): 펀드 관리에 있어 재무수익과 함께 사회·환경에 긍정적인 임팩트 창출을 고려하기 위한 운영 원칙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와 임팩트 목표 연계, 임팩트 달성 전략 등을 포괄한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X	X

5

PDC (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



PDC(포트폴리오 탈탄소화 연합)는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프랑스 자산운용사 아문디(Amundi),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스웨덴 국가연금기금인 AP4가 2014년 함께 설립한 민관협력체제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PDC는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탈탄소화함으로써, 탄소 집약적인 기업으로부터 자본을 회수하여 같은 부문의 탄소 효율이 높은 기업에 재투자하도록 촉진한다. PDC 회원사는 32곳, 8000억 달러에 달한다. 세계 최대 보험사인 독일 알리안츠그룹, 로베코셈, BNP인베스트먼트 등이 PDC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PDC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우선 그들의 핵심 투자 포트폴리오의 탄소발자국을 몬트리올 탄소 서약서(Montréal Carbon Pledge)를 통해 측정 및 공개해야 하며,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실행 가능한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인 ABP는 주식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을 16% 낮추고, 프랑스 정부 연기금 FRR은 기준치 대비 30% 낮은 포트폴리오 탄소 집약도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X	X	X	X

3. 투자자 이니셔티브

6

UNEP FI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Finance Initiative)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91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국제 파트너십이다. 1992년 은행업계가 UNEP Financial Institutions Initiative를 출범시켰고, 1995년 보험업계에서 UNEP Insurance Industry Initiative를 출범시켰으며, 2003년 두 이니셔티브가 통합되고 자산 운용사, 연기금 등이 참여해 현재에 이르렀다. 2021년 1월 기준, 전 세계 378개의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투자사)이 참여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성장했다.

UNEP FI는 금융기관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ESG를 비롯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경영과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정보공개를 추구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약속, 경영지침,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등 3개 분야 내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UNEP FI 참여를 원하는 금융기관은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자발적 참여 선언에 대한 동의 의사를 CEO의 승인 하에 UNEP FI 사무국에 전달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9개 금융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X	X	X	X

7

UN PRI

(United Nations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유엔책임투자원칙)는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투자 흐름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이니셔티브로, 2006년 유엔 사무총장이던 코피 아난(Kofi Annan)이 주도해 이 원칙을 만들었다.

UN PRI에 가입 서명한 기관은 2021년 1월 현재 3,615곳에 달한다. 지난 15년간 서명기관의 투자자산 비중이 16배 늘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11개 사가 가입되어 있다.

UN PRI가 제시한 책임투자 원칙은 총 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투자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통합하고,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투자산업의 책임투자 원칙 수용과 이행을 촉진하는 것 등이다.

PRI에 서명하면, 매년 책임투자 원칙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PRI는 A+부터 E까지 6단계로 점수를 매긴다. 만약 해당 보고가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재평가 기회를 준다. 그럼에도 보고 내용이 부족할 경우 서명기관에서 배제된다.

PRI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서명기관들은 모든 관리자산의 최소 절반 이상에 대해 책임투자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할 담당직원 및 임원레벨의 감독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X	X

4. 자본시장 데이터 제공 기관

1

Bloomberg

Bloomberg

블룸버그(Bloomberg)는 10년 이상 전 세계 기업의 ESG 공시 데이터를 제공 해왔으며, 2020년 8월부터는 ESG Score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8년 9월 CDP와의 제휴를 통해 블룸버그 터미널(단말기)에서 기업의 탄소발자국, 에너지 사용량 등을 조회하도록 했으며, 2009년 7월 ESG 데이터 서비스를 런칭했다.

블룸버그의 ESG 데이터는 102개국 11,700개 이상의 기업에서 공개한 정보를 수집해 검증한 후 블룸버그 터미널에 공개되는데, 단말기 이용자만 평가 결과와 내용에 접근이 가능하다.

ESG Score에는 ESG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 환경 및 사회 성과, 성평등(gender equality), 공시 투명성 등에 관한 평가점수가 포함된다. 또한, 자체 평가점수 외에 MSCI,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 등 주요 ESG 평가 기관 자료도 함께 제공,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한편, 블룸버그는 2020년 8월 최초로 석유 및 가스기업 252개의 환경(E) 및 사회(S) 점수를 공개했고, 4,350개 기업의 지배구조(G) 점수도 공개했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	X

2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로, 전 세계 9,6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경영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공시정보를 분석해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매년 발표되는 CDP 평가결과는 전 세계 금융기관의 ESG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자원의 3대 영역(아래 참조)에 대한 데이터 공개 여부, 리스크 인식 및 관리 이해도, 목표 설정 등에 대해 피평가기업이 응답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전략, 지배구조 등
- 수자원: 취수량, 사업상 중요도, 관련 정책, 의사결정구조 등
- 산림자원: 산림 훼손 원자재, 관련 정책, 의사결정구조 등

평가 결과는 A~D등급으로, 데이터가 미공개이거나 부족해 평가가 불가능한 기업은 F등급을 부여한다. 2020년 평가 결과, 삼성전기, 신한금융그룹 등 국내 기업 7개사가 A등급을 받았다.

또한 CDP는 2020년 약 4,000여 개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배출량을 추적할 수 있는 온도평가(temperature rating)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위험을 투자자들이 더 잘 예측 및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X	X	✓	✓

4. 자본시장 데이터 제공 기관

3

FTSE Russell



FTSE Russell은 2001년 ESG 평가를 바탕으로 한 지수인 'FTSE4Good'을 시작하였다. DJSI의 S&P500 ESG 지수, MSCI의 ESG Leaders 지수와 함께 3대 ESG 지수로 꼽히며, 유럽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분류된다.

사회책임투자(SRI) 지수의 하나로서 담배, 무기, 석탄 등 일부 산업은 피평가 기업에서 제외된다.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평가하여 분기별로 지수에 편입된 기업을 발표하며, 현재 14개 주제별로 300개 이상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2020년 9월 현재 국내 기업은 약 30개사가 편입되어 있다.

FTSE4Good 지수의 ESG 각 분야를 구성하는 14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환경: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공급망, 오염 및 자원, 물안보
- 사회: 근로기준, 공급망, 인권과 지역사회, 건강과 안전, 소비자 책임
- 거버넌스: 세금 투명성, 리스크 관리, 기업지배구조, 반부패

각 부문별로 0~5까지 점수화해 결과를 산출하며, 피평가기업이 각 평가항목과 관련된 정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또한 평가항목 중 일부 부문에서 기준에 미달되면 지수 편입에서 제외된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	X

4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SCI는 1999년부터 ESG 평가를 제공해왔으며, 초기 ESG 분야를 개척한 RiskMetrics, Innovest, KLD 등을 인수합병해서 2011년부터 ESG 리서치를 독자적으로 제공한다. 2019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애널리틱스 기업 Carbon Delta도 인수하였다.

MSCI ESG 평가는 공개된 기업 정보, 정부 DB, 매크로데이터 등을 활용해 실시되며, 피평가기업은 정보 검증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ESG 영역별 10개 주제(아래 참조), 35개 핵심이슈를 평가하여 AAA~CCC의 7개 등급으로 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거버넌스 평가에 가중치가 부여되며, 전체 평가등급 외에 ESG 영역별 등급도 별도로 부여한다. 매주 새로운 정보가 반영돼 업데이트되며, 심층 기업분석 리뷰는 연간 1회 정도 제공된다.

- 환경: 기후변화(탄소배출, 기후변화 취약성 등), 자연자본(생물다양성, 물 스트레스 등), 오염 및 폐기물, 환경 기회(청정기술 기회, 재생에너지 등)
- 사회: 인적자원(노동, 임직원 건강 및 안전 등), 제품책임(제품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이해관계자 반대(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사회적 기회(취약계층의 보건, 영양, 금융 등 접근성 등)
- 거버넌스: 기업지배구조(이사회, 경영진 보수 등), 기업행동(반부패 등)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	X

4. 자본시장 데이터 제공 기관

5

RepRisk



RepRisk는 1998년 설립된 ESG 데이터 평가기관이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전 세계 15만 개 이상의 기업 ESG 리스크를 분석한다. RepRisk에서 2007년부터 운영하는 ESG Risk Platform은 ESG 리스크에 대한 세계 최대 실사 데이터베이스로, ESG와 연관된 기업 경영, 투자, 사업 관계 등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RepRisk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목적은 중대한 ESG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에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20개 이상의 언어로 된 9만여 개의 정보를 검토해 매일 업데이트한다. 또한 GRI, SASB, UNGC 등 글로벌 ESG 표준에 의거해 28개의 ESG 이슈, 58개의 하위주제를 설정하여 ESG 리스크를 측정한다.

특히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온라인 정보 출처(미디어, 싱크탱크, 뉴스레터, 소셜미디어 등)를 통해 비정형 ESG 리스크를 식별한다. 기업의 자체 보고나 공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외해, 제3자 데이터를 통해 이슈를 분석하는 게 특징이다. 이용자들은 ESG 리스크를 매일 모니터링할 수 있어, 350곳 이상 고객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한다. 일례로 플라스틱 산업에서 ESG 리스크가 높은 10개 기업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최근 2년간 플라스틱 관련 ESG 사고 빈도와 심각도를 함께 조사, 산정했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X	X

6

S&P



미국의 금융정보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다우존스(S&P Dow Jones)와 스위스 지속가능경영 평가사인 로베코샘(RobecoSAM)은 1999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를 개발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전 세계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 환경 및 사회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다.

피평가기업이 설문지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공통 평가 항목과 산업별 항목으로 구분된다. 대개 80~120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평가 결과 상위 10%는 대상 기업에 따라 DJSI 월드 지수, 아시아-태평양 지수, 코리아 지수 등에 편입된다. 국내에서는 매년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결과를 발표하며, 2020년 월드 지수에는 국내 기업 17개사가 편입되었다.

2019년 12월 S&P 글로벌이 로베코샘의 ESG 평가사업을 인수했으며, 2020년 5월 S&P 글로벌 ESG 스코어(S&P Global ESG Score)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S&P 글로벌 ESG 스코어는 전 세계 시가총액의 95%에 해당하는 7,300여 개 기업의 ESG 점수를 제공한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	✓

4. 자본시장 데이터 제공 기관

7

Sustainalytics



Sustainalytics(서스테이널리틱스)는 1992년 설립되어 기업의 ESG 리스크 평가 및 리서치 등의 높은 전문성을 보여온 평가기관이다. 글로벌 펀드 평가회사 모닝스타(Morningstar)가 2020년 Sustainalytics를 인수했다. 이후 모닝스타는 Sustainalytics의 ESG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모든 펀드, 주식, 자산 분석에 ESG 요소를 통합하고 있다.

Sustainalytics의 ESG 리스크 평가는 공개된 정보 기반으로 ESG 리스크가 기업의 재무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피평가기업의 요청 시 보고서 발간 전 검토와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평가 결과는 0~50 사이 점수 및 리스크 등급으로 표시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의 ESG 리스크가 크다. 전 세계 4만 개 기업의 데이터와 2만 개 기업의 ESG 평가등급을 제공한다. 2020년부터 자사 웹사이트에 4,000개 이상 기업의 ESG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Sustainalytics의 ESG 리스크 평가체계는 1) 거버넌스, 2) 산업별 중대 ESG 이슈(material ESG issues), 3) 기업별 기타 ESG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별 70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평가하며, 세부 평가항목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Sustainalytics는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검증기관이다.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들도 ESG 채권을 발행하면서 Sustainalytics로부터 ESG 평가 및 인증을 받았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	X

8

Vigeo Eiris



Vigeo Eiris는 2002년 설립된 ESG 평가, 데이터, 분석도구 및 지속가능금융 분야 전문 기업이다. 기업의 전략, 운영, 관리 측면에 ESG 요소를 통합하는 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Vigeo Eiris의 평가등급은 피평가기업이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를 회사의 활동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수준을 보여준다. 2019년 4월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가 인수하였다.

Vigeo Eiris는 기업들이 ESG 기준을 사업부서 및 전략적 운영(지속가능채권, ESG 등급, CSR 평가 등)에 통합하는 것을 지원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지속가능투자 전략,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전략, 포트폴리오 분석, ESG 지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Vigeo Eiris의 ESG 평가체계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요소가 서로 관련 있고 보완적이라는 시각에 따라 각 요소를 분리하지 않는다. 또한 ISO 26000 지침을 기준으로 환경, 인적자원, 인권, 지역사회 참여, 비즈니스 행동 및 기업 거버넌스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피평가기업의 중대 ESG 이슈는 비즈니스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정된다.

MSCI, Sustainalytics, Bloomberg, FTSE Russell 등과 마찬가지로 Vigeo Eiris도 2020년부터 자사의 ESG 등급을 일반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	X

5. 기타 이니셔티브 및 기관

1

Capitals Coalition



자연자본(natural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해당하는 370개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연합체로, 이전 조직인 Natural Capital Coalition(NCC)과 Social and Human Capital Coalition(SHCC)이 통합되어 2020년 1월 출범하였다. 자연자본, 사회자본, 인적자본, 생산자본 등 ‘자본(capitals)’ 개념을 통해 자연, 사람, 경제 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가치(value)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모든 조직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불평등 심화 등 3대 도전과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GRI, WBCSD, 세계은행 등에 의해 설립된 NCC는 2016년 Natural Capital Protocol을 통해 주로 민간부문이 자연자본을 측정하고 계량화하여 자연 생태계와 경제적(재무적) 의사결정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2018년 WBCSD와 IIRC 등이 설립한 SHCC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개인에게 내재된 지식, 기술, 역량이 이익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자본과 인적자본을 정의하고, 2019년 Social and Human Capital Protocol을 통해 이들 자본의 임팩트 측정 및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X	✓	X

2

Glass Lewis



Glass Lewis는 2003년 설립된 세계 2위의 의결권 자문기관으로, 1,300명 이상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거버넌스 관련 동향과 의결권 행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케이스별로 주주권 행사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매년 30,000건 이상의 주주총회 의안 분석 등의 리서치 보고서를 발간한다.

또한 ESG 리스크 평가기관인 Sustainalytics와 협력하여 Sustainalytics의 서비스 중 4,5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ESG 연구 및 평가 내용을 Glass Lewis의 거버넌스 리서치 및 의결권 자문 플랫폼에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Glass Lewis는 SASB Alliance Organization의 회원사로서 서비스 플랫폼에 SASB의 업계별 표준을 표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ICGN(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 회원사이자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 서명기관이다. 외국 의결권 자문기관으로는 처음으로 2018년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에 참여했다. 매년 국내 기업의 750~800개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기관투자자에게 의안 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한편, 국내 대표적인 의결권 자문기관으로는 대신경제연구소 내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있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의결권 자문사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리·감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향후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등록 및 신고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	X

5. 기타 이니셔티브 및 기관

3

IMP (Impact Management Project)



IMP는 2016년 조직된 글로벌 비영리기구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임팩트를 측정, 관리 및 보고하는 방식에 있어 합의된 글로벌 지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세계 최초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운용사인 영국 브릿지스 펀드 매니지먼트(Bridges Fund Management)가 주도해 만든 글로벌 협의체다.

투자자, 기업, 비영리단체, 표준 및 회계기준 제정기관 등의 관점을 종합해 임팩트의 구성요소를 정의하여 ESG 관련 기업의 보고, 임팩트 투자, 자선 사업 등 관련 활동 전반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된 실무자 커뮤니티와 CDP, CDSB, GRI, IFC, SASB 등 16개 기관이 임팩트 표준 설정을 협의하고, 임팩트 측정 및 관리에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 IMP는 임팩트를 아래의 5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 What: 임팩트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결과는 무엇인가?
- Who: 결과를 경험하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 How much: 결과를 경험하는 이해관계자의 수·기간·정도는?
- Contribution: 임팩트 활동을 안 했을 경우보다 나은 결과인가?
- Risk: 임팩트 활동이 없었을 경우 존재했을 리스크는 무엇인가?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X	X	X

4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ISS는 1985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기관이다. 2,000명 이상의 기관 투자자에게 기업의 거버넌스 및 책임투자에 관한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42,000건 이상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며, ESG 동향 연구 및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전 세계 자본시장별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60% 이상이 의결권 행사 시 ISS 자문을 참고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총회 의안 찬반 여부에서 ISS 및 Glass Lewis 권고와 90%에 달하는 일치율을 보이는 등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SG 평가 관련하여, 이사회 구성, 경영진 보수, 주주의 권리, 감사 및 리스크 관리의 4개 영역별 총 230여 개의 항목을 평가하는 거버넌스 평가(Governance QualityScore)가 잘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 환경·사회(E&S) 공시 수준 평가, 기업별·국가별 ESG 평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020년 3월 기후변화 이슈 관련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11월에는 중대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자본시장별로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 구성 시 인종, 성별 등 다양성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추가되었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	X

5. 기타 이니셔티브 및 기관

5

UNRISD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RISD(유엔사회개발연구소)는 UN이 추구하는 사회개발 관련 주제에 대해 다양한 학제간 연구 및 정책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1963년 설립되었다. 현재 사회정책과 개발(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측면(Social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연구로, 2018년 SDPI(Sustainable Development Performance Indicators)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SDPI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로, 3단계(Tier 1~3) 약 80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경제·환경·사회·거버넌스 분야로 구분된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단기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환경과 사회의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맥락화하는 작업이다.

2021년 상반기 지표체계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하반기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기업 활동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달성 관련 UN 내 표준으로 정립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X	X

6

WBA (World Benchmarking Alliance)



WBA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달성을 목표로, 특히 SDGs 목표 17(글로벌 파트너십)을 핵심으로 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그룹 연합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자 등 전 세계 약 18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WBA는 SDGs 달성을 위해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7가지 영역(식량 및 농업, 순환경제, 디지털 기술, 사회, 탈탄소화 및 에너지, 도시, 금융시스템)을 규정한다.

또한 각 영역별로 기업의 SDGs에 대한 기여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벤치마크를 개발하고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대표적인 예로, Corporate Climate Action Benchmark는 석유와 가스, 전기, 자동차 등 3개 주요 탄소 배출 산업 내 기업의 기후행동 성과를 평가한다. Gender Benchmark는 기업들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을 어떻게 촉진하는지 평가하고, 특히 SDGs 목표 5(성 평등)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측정한다.

또한 WBA에서는 SDG2000(SDGs 달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2,000개사 리스트)을 발표하였는데, 2021년 1월 현재 한국 기업 47곳이 포함되어 있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X	✓	X

5. 기타 이니셔티브 및 기관

7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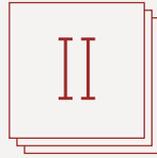
WBCSD(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글로벌 기업들의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로, 1995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설립되었다. 200개 이상의 주요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GS칼텍스, 한국타이어가 가입하였고 한국지부인 KBCSD에는 다수의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WBCSD는 기후와 에너지, 순환경제, 소셜 임팩트 등 여러 지속가능성 난제에 대한 효과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사 및 가치사슬 상의 기업들과 협력해왔으며, 70개에 달하는 국가 비즈니스 위원회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회원사들 간의 지식 공유와 지속가능성 표준 이행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를 함께 표명하며,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파리기후변화 협약 등 공동의 비전에 맞춰 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0년 9월, WBCSD는 비재무정보 공시 표준 관련 시장의 컨센서스를 마련하기 위해 UN PRI(유엔책임투자원칙)와 ESG 데이터에 관한 협력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E	S	G	산업별 구분	지역별 구분
✓	✓	✓	✓	X



2021년 ESG 동향 전망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ESG는 전문용어 취급을 받았습니다. 금융기관이나 투자사들은 물론, 기관투자자들조차 생소한 분야로 여겼지만, 이제 ESG는 국내외에서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새로운 지표가 되었습니다.

II장에서는 2021년 국내와 해외에서 꼭 알아야 할 8대 ESG 규제와 동향들을 소개합니다. 이정표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를 탐색해봅니다.

1. 해외 8대 ESG 동향 50

2. 국내 8대 ESG 동향 61

<p>1 ... ESG 정보공개 표준화</p>	<p>해외 8대 ESG 동향</p>	<p>2 ... 유럽 기후법과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p>	<p>1 ... 금융위원회 ESG 정보공개 의무화</p>	<p>국내 8대 ESG 동향</p>	<p>2 ... ESG 채권 발행 활성화</p>
<p>4 ... EU Taxonomy, SFDR, TCFD 채택 등 기후금융 확산</p>	<p>3 ... 탄소국경세 도입</p>	<p>5 ... 플라스틱 규제 도입</p>	<p>4 ... 2050년 탄소중립 선언</p>	<p>3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기 시행</p>	<p>5 ... 금융권 탈석탄 선언</p>
<p>7 ... 스튜어드십과 주주 행동주의</p>	<p>6 ... 생물다양성을 둘러싼 금융 프레임워크</p>	<p>8 ... 공급망 책임 및 인권 보고 의무화</p>	<p>7 ... 여성이사 할당제</p>	<p>6 ... 환경부 K택소노미 지정</p>	<p>8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p>

1. 해외 8대 ESG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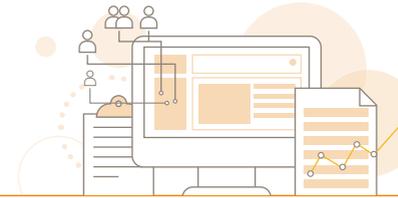
1

ESG 정보공개 표준화

ESG가 자본시장에 주류화(mainstream)되면서, 가장 큰 이슈는 ESG 정보공개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ESG 표준 제정기관, 데이터 공급업체, 평가기관 등은 600개가 넘는다. ESG 정보공개 표준만 해도 2021년 1월 현재, GRI, SASB 등 대표적인 표준 외에도 전 세계에 374개나 존재한다.

때문에 2020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비재무공시의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안건을 발표했다. 재무정보처럼 비재무정보 또한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IIRC(국제통합보고위원회), CDSB(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CDP(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 등 5개 기관은 2020년 9월 공통 표준 제정에 합의했고, 12월 프로토타입 보고서를 공개했다. SASB와 IIRC는 2021년 중반까지 합병기로 하고 이름을 'Value Reporting Foundation'으로 바꾼다. CDSB 또한 합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비즈니스협의회(IBC)는 4대 회계법인(Deloitte, EY, KPMG, PwC)과 함께 2020년 9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를 발표했다. 21가지 핵심지표와 34가지 확장지표로 구성된 SCM은 GRI를 중심으로 다른 공시 표준 및 프레임워크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진행된 '다보스 어젠다 2021'에서 전 세계 61개 기업이 이 지표체계를 활용해 비재무 정보를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ESG 정보공개 표준 논의에서 가장 큰 주목을 끌 기관은 IFRS(국제 회계기준) 재단이다. IFRS 재단은 2021년 ESG 정보공개 표준 제정을 위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SSB,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스 후거보스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의장은 지난해 "기업 연차보고서의 실무지침서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이슈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021년 상반기에 공개초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ESG 정보공개 표준화 논의는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1. 해외 8대 ESG 동향

2

유럽 기후법과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며, EU가 2050년 전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대륙이 될 것임을 선포했다. 2020년 3월에는 법적 기반인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이 상정됐고, 오는 6월까지 유럽의회와 이사회 최종 승인을 받으면 발효된다. EU 정상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로 합의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60% 감축을 기후법에 명시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유럽 기후법을 뒷받침할 기후정책 법안들 또한 대거 개편될 전망이다.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규정, 토지 이용 및 산림(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규정, 재생에너지, 탄소 국경세 등 이른바 ‘Fit for 55’로 불리는 법안들이 그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에서 가장 핵심은 2020년 4월 발표된 ‘지속 가능금융 10대 실행계획’이다. 이 중에는 ▶EU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일명 EU Taxonomy) 마련 ▶EU 녹색채권 표준 수립 ▶저탄소 벤치마크 신규 설정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관련 비재무정보(리스크 포함) 공개 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EU는 기후변화 및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 로드맵을 서두르고 있다.

3

탄소국경세 도입

탄소국경세는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 격차에 따른 가격차 보전을 위한 세금이다. EU는 2023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U 입장에서는 탄소배출 감축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진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필수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EU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EU 공청회안에 따르면, ▶탄소 집약적인 제품이나 업종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수입품에도 EU의 배출권거래제(ETS)를 적용하는 방안 ▶모든 수입품에 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회계법인 EY한영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 중국 3개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2023년 철강·석유·전자·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종에서만 해마다 5억 3,000만 달러(6,000억 원)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 16억 3,000만 달러(1조 8,700억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1. 해외 8대 ESG 동향

4

EU Taxonomy, SFDR, TCFD 채택 등 기후금융 확산

EU 택소노미, 일명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2020년 3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으며, ▶기후변화 리스크 완화 ▶기후변화 리스크 적응 ▶수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 ▶자원순환 경제로 전환 ▶오염물질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 등 6대 부문이 녹색으로 인정된다. 택소노미는 2022년 1월부터 공식 적용되는데,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에 따라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업은 향후 택소노미에 따른 활동 및 성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모든 투자자와 금융기관도 택소노미가 적용된 투자 및 금융자산 비중을 공개해야 한다.

EU는 또 3월부터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실시한다. SFDR은 금융기관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리스크, 지속가능성 관련 부정적 영향, 금융상품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원칙이 담겨있다. 지속가능성 리스크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EU는 2018년부터 유럽 기업에 적용되던 비재무정보 공개지침(NFRD)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U는 회계연도 평균 근로자수 500인 이상, 자산총액 2,000만 유로 또는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이나 공익법인에, 비재무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 개편으로 의무 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S)와 지배구조(G) 측면의 보고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를 의무화하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020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은 서명기관들에 TCFD 채택을 의무화했고, 영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홍콩 등도 의무화 대열에 동참했다.



1. 해외 8대 ESG 동향

5

플라스틱 규제 도입

EU는 순환경제 플랜 2.0을 2020년 3월 마련하고 총 35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규제는 핵심 사안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1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제조업체인 생산자 책임이 강화돼, 빨대와 면봉 등 일회용 플라스틱 출시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90% 회수,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 및 제품 폐기 및 재활용 방법 제시 의무화, 제품 내 플라스틱 함유량 등 정보제공 의무화(라벨) 등이 포함돼 있다.

EU는 2030년까지 패키징에 바이오 성분 함유량을 최소 60% 이상 확대하고,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50%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약 57억 유로(7조 6,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거둬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플라스틱 제품은 한국의 대(對)EU 5대 수출 품목으로, 2019년 기준 21억 4,000만 달러(2조 3,000억 원)에 달한다. 향후 지속가능한 생분해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 개발이 경쟁우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생물다양성을 둘러싼 금융 프레임워크

MSCI의 <2021 ESG Trends to Watch>에 따르면,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이슈는 “향후 기후변화처럼 폭발적인 ESG 이슈”로 손꼽힌다. 2021년 15번째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오는 5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Post-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이를 탄소회계에 반영하듯, 생물다양성 발자국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UNEP FI와 WWF(세계자연기금)을 비롯한 34개 금융기관과 영국, 프랑스, 페루, 스위스 등 금융규제당국, 세계은행, OECD 등 62개 기관이 모여 2020년 9월 ‘TNFD(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를 설립했다. 2022년 말까지 생물다양성과 자연보존에 관한 금융 프레임워크를 만들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악사(AXA), BNP 파리바, Sycomore, Mirova 등 자산운용사 연합은 기업의 생물다양성 발자국(biodiversity footprint)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이 측정되면, 이는 공급망 이슈와 함께 기업의 가치사슬에 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1. 해외 8대 ESG 동향

7

스튜어드십과 주주 행동주의

자본시장의 책임투자가 강화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과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은 2020년 12월 <Our 2020 Stewardship Expectations>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업 이사진 55명의 재선임 반대투표를 행사하고, 탄소 집약적인 440개 기업 이사진 191명을 ‘와치 리스트(On Watch)’에 올렸다. 2021년에는 기후변화 관련 주주 관여활동(Engagement)을 1,000개 이상의 기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블랙록은 지난해 기후변화 관련 신규 관여(engagement) 대상 기업 110개를 추가 선정했는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에 투자한 한국전력을 대표 사례로 보고서에 실었다.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은 2021년 서한에서 기업들에게 “2050년 넷제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투자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별 정량적 지표를 보고하는 SASB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기후변화의 영향 보고를 위해 TCFD 보고를 권고했다.



‘이사회 다양성(Diversity)’에 관한 기관투자자들의 정보공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SSGA(State Street Global Advisor)는 2021년부터 투자 대상기업의 성별·인종 다양성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정책문서를 공개했다. SSGA는 이사회 다양성 부족을 이유로 전 세계 234개 기업의 이사회 지명자에 반대투표를 던졌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또한 미국과 유럽 기업에 대한 투표 기준에 여성이사 비율을 포함시켰다. 블랙록도 아시아 지역에 최소한의 성별 다양성 기대치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반대투표를 할 것을 밝혔다.



1. 해외 8대 ESG 동향

8

공급망 책임 및 인권 보고 의무화

ESG 이슈 가운데 언론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이슈는 ‘공급망 ESG’ 부문이다. 2015년 영국에서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이 만들어진 이후, 2017년 ESG 평가기관들은 공급망 내 인권조사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2017년 9월 글로벌 공급망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는 ‘공급망의 강제 노동과 인권 지수’를 발표했다. 2018년 6월 대형 유통회사 테스코와 타깃은 ‘CDP 공급망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는 등 공급망 인권 문제는 기업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엔책임투자원칙(PRI)은 투자 과정에서 인권 항목을 포함시키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존 정보공개 프레임워크 중 한 부문으로 공급망 인권 보고 의무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2/4분기를 목표로 기업 공급망 실사제도(due diligence)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EU 수출기업에도 적용될 방침이기에, 책임감 있는 원료조달(Responsible Sourcing) 문제는 향후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2. 국내 8대 ESG 동향

1

금융위원회 ESG 정보공개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다. 먼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했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경우 2022년부터 1조 원 이상, 2024년부터 5,000억 원 이상,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사회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매년 100여 개 기업 정도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왔지만, 거래소에 보고서를 공개하는 기업은 20개에 불과했다. 이에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적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고, 2030년 이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을 공개하기도 했다. 거래소가 직접 선정한 권고 공개 지표 12개 항목, 21가지 지표도 공개했다. 환경 부문 5개 항목(▶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사용 ▶폐기물 배출 ▶법규 위반·사고), 사회 부문 4개 항목(▶임직원 현황 ▶안전·보건 ▶정보 보안 ▶공정경쟁), 거버넌스 부문 3개 항목(▶경영진의 역할 ▶ESG 위험 및 기회 ▶이해관계자 참여)이다.

2. 국내 8대 ESG 동향

2

ESG 채권 발행 활성화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 채권(Social Bond), 이 둘의 성격을 합친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등 특수목적 발행 채권의 증가율도 심상치 않다. 전 세계적으로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2020년 8월 아시아 지역 ESG 채권 발행 1위에 기록되기도 했다.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 따르면, 글로벌 ESG 채권 발행량은 2018년 1,980억 달러에서 2019년 3,2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65% 성장, 2020년에는 4,8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는 등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까지는 녹색 채권의 비중이 발행량의 80%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녹색채권의 비중이 60%로 낮아지고 사회적 채권의 비중이 25.5%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다.

국내 ESG 채권 또한 2019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원화 ESG 채권 발행액은 2018년 9,500억 원에서 2019년 27조 3,300억 원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2020년 11월 기준 ESG 채권 발행액은 51조 원에 달했다. 채권 발행이 빠르게 증가해 블룸버그 집계 결과 2020년 8월엔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발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가별 규모로 따지면 미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 4위였다.



국내 ESG 채권 발행은 사회적 채권이 주를 이뤘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주택저당증권)를 크게 발행했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등 공기업과 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에서도 사회적 채권을 활발히 발행했다.

2021년에는 민간 기업도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녹색채권의 발행이 증가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친환경 설비 개선을 위해 2,500억 원을, 현대오일뱅크는 탈황 인프라 증설을 위해 2,000억 원을 녹색채권으로 조달했다. LG화학·LG전자 등 계열사들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앞둔 LG그룹도 녹색채권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2. 국내 8대 ESG 동향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기 시행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21년 3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 놓은 뒤 실제 배출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그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기 시행으로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업종과 배출권 수량이 늘었다. 기존에 62개 업종 중 26개 업종만 배출권을 구매해야 했다면, 3기부터는 69개 업종 중 40개 업종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또 이전에는 할당된 배출권 중 3%만 돈을 주고 구매하면 됐다면, 이젠 10%를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유상 할당을 늘려 오염 원인자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된 제3기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투자사나 개인 등 제3자 거래를 통해 배출권의 낮은 유동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가 확장되면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배출권 리스크도 관리해야 한다. 무상 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해 재무적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4

2050년 탄소중립 선언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2060년까지, 일본은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선언한 지 일주일 후에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新)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산업부에서는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한국형 RE100 캠페인' 도입과 석탄화력 발전 30기 폐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확대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마무리 지었다.

또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도 논의 중이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이미 부담금을 내는 기업의 반발,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는 탄소세의 역진적 성격, 물가 상승 등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이에 맞춰 금융위원회도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녹색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게 자금조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후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 국내 8대 ESG 동향

5

금융권 탈석탄 선언

ESG 투자 방법 중 한 가지인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그중에서도 석탄 투자 배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다. 탈석탄에 다소 소극적이던 국내 금융사·연기금·보험사들도 글로벌 흐름에 따라 석탄을 배제하겠다고 나섰다.

탈석탄 금융의 포문을 연 건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이다. 이후 DB손해보험,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도 연이어 대열에 참가했다. 민간 금융사로는 KB금융이 최초다. 2020년 KB금융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석탄화력 발전 감축을 위해 국내외 석탄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채권 인수 사업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그룹도 ‘탈석탄 금융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석탄과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주력사업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밀고 있는 한화그룹의 6개 금융사 또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석탄발전 관련 일반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석탄과 거리를 뒀다.



특히 비금융권의 탈석탄 선언도 이어졌다. 한국전력은 비금융사 최초로 탈석탄을 선언했다. 한국전력은 베트남 봉양2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국내외 환경단체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전력은 2021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으로부터 투자 중단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네덜란드 연기금(APG)는 한전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봉양2호기 설계·조달·시공사업자로 참여한 삼성물산도 “앞으로 석탄 관련 신규 사업엔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삼성물산에 이어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 관계사들도 “석탄 사업에 투자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탈석탄 움직임은 올해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2. 국내 8대 ESG 동향

6

환경부 K택소노미 지정

저탄소 경제로 안정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녹색채권 발행이 필수적이다. 녹색채권 활성화의 첫 시작은 ‘택소노미(Taxonomy)’다. 녹색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어떤 경제활동이 해당하는지 가리는 작업이다.

환경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택소노미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에 대략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6가지 환경목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기여해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정의했다. ①기후변화 완화 ②기후변화 적응 ③천연자원 보전 ④생물다양성 보전 ⑤오염 방지 및 관리 ⑥순환자원으로의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녹색채권원칙(GBP)를 참고하여 10대 분야를 언급했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오염 방지 및 저감 ▶지속가능한 농·축·어업 등 ▶생물 다양성 보전 ▶청정 운송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적응 ▶순환경제 ▶친환경 건물 분야다.

7

여성이사 할당제

OECD 29개 회원국 중 8년 연속 유리천장 지수 꼴찌를 기록한 한국이 오명을 벗기 위해 여성 임원 할당제를 의무화했다. 2019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여성 임원 할당제’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사회에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삽입한 개정된 법안에 따라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이사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등기 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여성 임원 할당제가 통과된 지 1년 반 남짓 지났으나, 여전히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절반이 넘었다. 2020년 7월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장법인 2,148개 기업 중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6.6%에 달했다.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중 여성 등기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9.4%였다. 단 45개 기업만이 한 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기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보다는 긍정적인 결과였다. 2020년 전체 상장법인 여성 임원은 196명으로 2019년에 비해 1.4%p 늘어났다.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중 여성 임원이 있는 기업은 45개로 2019년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2. 국내 8대 ESG 동향

8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내에선 2016년 12월 처음 도입돼 올해로 5년째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 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영국과 일본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ESG 수탁자 책임을 강화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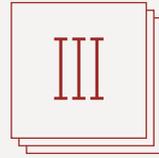
영국의 경우, 재무보고위원회(FRC)에서 수탁자 책임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사회 이슈로 확대했으며, 투자를 집행하기 전 기업의 주요 ESG 이슈를 살펴보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본 금융청도 스튜어드십 개정을 통해 ESG 이슈를 포함하고, 의결권 자문사 관련 별도 원칙을 반영했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글로벌 흐름과 궤를 같이 할 전망이다.



당장 시행이 확정된 것은 의결권 자문사에 관한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 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1년 중에 제정하고, 추후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결권 자문사 신고·등록 제에 대한 전망도 나온다.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146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심의·의결했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이어 2021년 1월 우정 사업본부까지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내 4대 연금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게 됐다.





ESG 용어 정리

ESG 동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와 기관 및 이니셔티브도 많습니다.

III장에서는 I장과 II장에서 다루지 않은 주요 용어와 이니셔티브 및 기관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또한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묶어서 함께 제시했습니다.

1. 주요 용어 76

2. 이니셔티브 및 기관 88

1. 주요 용어

그리드 패리티

Grid Parity

전기 생산에 있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비용이 화력발전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과 같아지거나 저렴해지는 지점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이다.

그린스완

Green Swan

나심 N. 탈레브의 ‘블랙스완’을 기후위기에 빚댄 용어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의 명백한 발생 가능성을 지칭한다. 각국 중앙은행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은 2020년 1월 발간한 보고서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을 통해, 기후변화가 환경과 사회를 위협하고 실물경제 위기를 발생시켜 중국에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린스완을 분석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린워싱/ 위장환경주의

Greenwashing

ESG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업이 자사의 친환경적 측면을 실제 영향보다 과장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기업의 ESG 활동의 가치를 부풀려 홍보해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으려고 위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기후중립

Climate Neutrality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특별 보고서 <Global Warming of 1.5°C>(2018)에 따르면, 기후중립은 인간 활동이 기후 시스템에 어떠한 실질적 영향도 초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넷제로(net zero, 탄소 포함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나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제로)뿐 아니라, 태양 복사 표면반사율이나 국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활동의 생물-지구물리학적(bio-geophysical) 결과가 설명되어야 한다. 한편, 탄소중립과 넷제로는 엄밀한

사회성과 연계채권

SIB : Social Impact Bond

의미는 다르지만, 배출량(+) 대비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 더 이상 배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둘 다 ‘탄소 순배출 제로’의 의미로 같이 사용된다.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정부가 성과목표 달성 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성과급(pay for success) 형태로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이다. 정부 입장에선 사회문제 해결에 쓰는 예산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팩트 투자를 할 수 있다. 공공사업 운영기관과 투자자 간의 계약이므로, 자본 시장에서 실제 유통되는 확정금리부 채권(bond)은 아니다. 계약에 따른 권리로서의 채권으로 폭넓게 이해하면 된다.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5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의 교육 사업에 적용되었다.

설리번 원칙

Sullivan Principles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미국 기업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1977년 GM사의 감독위원회 중 최초의 흑인이자 침례교 목사인 레온 설리번(Leon H. Sullivan)이 제정했다. 당시 인종분리 정책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하의 남아공에서 설리번 원칙을 수용한 영미권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사업 제한과 금융 제재를 통해 남아공 정부를 압박했다. 이 사례는 기관투자자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사회책임투자(SR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인용된다. 한편,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된 후 1999년 설리번은 UN과 함께 글로벌 설리번 원칙(Global Sullivan Principles)을 제정했다.

1. 주요 용어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친환경 제품 생산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새로 제품을 생산할 때 기존에 생산된 제품을 재활용하는 등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Reduce, Reuse, Recycle로 표현되는 자원순환 과정이 대표적이다. 생산품이 소비된 후 바로 폐기되던 기존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주주를 중심으로 경영 목표와 시스템을 설정하던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업 경영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해관계자란 시장의 소비자, 정부, 종업원, 협력사 등 기업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자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넘어 기업과 관계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8월, 미국의 주요 기업 CEO들이 모인 Business Roundtable (BRT)에서 기업의 목표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설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다보스 매니페스토 2020>에서도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포용적 자본주의 Inclusive Capitalism

주주 자본주의로부터 탈피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 창출을 추구한다. 분기별 수익 등 단기 목표에 치중하기보다 기업과 사회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 활동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2015년 5월 영국에서 열린 ‘포용적 자본주의 회의’를 계기로 용어가 널리 알려졌다. 이후 글로벌 주요 기업 및 비영리재단,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포용적 자본주의 위원회(CIC, Council for Inclusive Capitalism)’가 결성되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기구에 지지를 천명한 바 있다.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ing

재무적 성과 추구하고 함께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추구하는 방법 중 하나다. 임팩트 투자를 하는 주체는 개인부터 금융기관, 연기금까지 다양하다. 임팩트 투자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지속가능투자 등과 유사하지만,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임팩트를 성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주참여

Shareholder Engagement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로 대표되는 개념으로, 투자자가 우려하는 이슈에 대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주요 이슈로 자리잡았다. 주주들은 의결권 행사, 주주 결의안 발송 등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다. 주주 관여 활동, 주주 개입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중대성/중요성

Materiality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식별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표시하는 개념이다. GRI, SASB 등 지속가능성 표준에서 제시하는 개념을 참고할 수

1. 주요 용어

있다. GRI에 따르면 중대성 이슈를 선정할 때 기업이 경제·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 또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SASB는 기업에 재무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요인을 중대성 이슈로 정의하며, 77개 산업별 중대성 이슈를 제공한다.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동향 분석, 이해관계자 설문 및 인터뷰 등을 토대로 핵심 중대성 이슈를 결정한다.

Double Materiality

이중 중요성(중대성)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환경·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즉 내부적 관점과 외부적 관점을 모두 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유럽증권감독청(ESMA)은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 표준 제정과 관련해, “ESG요소가 보고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포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이중 감독은 ESG 분야에서 기업의 위치와 성과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므로 이중 중대성 개념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2월 유럽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공개 했는데, 여기에 이중 중대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 기후변화처럼 현재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에 그 재무적인 영향력이 강화될 사안 또한 중대성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ESG 표준을 둘러싼 논의에서 ‘미래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출처 : 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 (2020.9)

전 과정 평가

LCA : Life Cycle Assessment

제품 및 서비스 등 산업 활동이 일어나는 모든 단계, 즉 원료 채취-가공-조립-수송-사용-폐기의 전체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환경에 가해지는 영향 및 잠재적 피해를 규명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다.

지속가능금융

Sustainable Finance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으로서,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주는 금융 활동을 뜻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에 대한 녹색금융(Green Finance)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금융서비스 및 상품, 시장체제 및 관련 제도를 아우른다. 금융이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성찰에서 나온 개념이다.

1. 주요 용어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언급됐으며, 생태계의 보존과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후 경제성장과 포용적인 사회 발전, 환경보호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환경, 사회 및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사회)책임투자 SRI, 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광의의 의미로는 ESG 투자, 지속가능투자, 벤처 필란트로피 (Venture Philanthropy)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투자에 대한 윤리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접근법에 근거한다. 18세기 퀘이커교와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윤리투자에서 20세기 인종 차별 반대, 시민권 확대 등을 추구한 사회책임투자, 최근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한 ESG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협의의 의미로는, 사회책임투자와 임팩트 투자, ESG 투자 등의 개념은 구분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미국 SIF(The Forum for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는 ESG 투자가 SRI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나, 최적의 투자성과를 강조하는 선관주의 의무(Fiduciary duty)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본다. 최근에는 SRI, 임팩트 투자, ESG 투자 간의 개념 차이를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임팩트 투자와 SRI는 사회적 책임과 가치, 임팩트에 방점을 두는 반면, ESG 투자는 경제적 가치 혹은 수익률에 방점을 둔다.

지속가능투자 Sustainable Investing

전통적인 투자 접근 방식에 ESG를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측면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뜻한다. 책임투자, ESG 투자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탄소가격제 Carbon Pricing

오염자 지불 원칙에 따라 배출한 탄소에 비용을 책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탄소세 등이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전 세계 46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한국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탄소국경 (조정)세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제품을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관세를 의미한다. EU는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23년 도입을 예고하였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다. 유럽은 중국, 미국에 이어 3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수출국으로, 탄소국경세가 도입 될 경우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탄소누출 Carbon Leakage

기업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 비용상의 이유로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타국으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탄소누출 현상이 심해질 경우 결국 탄소의 총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

1. 주요 용어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개인 또는 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특히 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일상 생활 및 제품 생산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폐기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기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측정 시, 아래와 같은 유형에 따라 측정한다.

- Scope 1: 기업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업장의 물리적 장치나 공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 Scope 2: 기업이 구매하는 에너지를 공급자들이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간접 배출
- Scope 3: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 배출 (원자재 공급, 제품 사용, 처분 및 운송 단계 등)

탄소세

Carbon Tax

탄소 감축 대책의 하나로 탄소 함유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석탄, 석유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세금 부과로 가격을 인상하여 탄소배출량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등 26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EU는 2023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Carbon Neutrality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의미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순 배출량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만, 잔류 배출을 허용하되 배출한 만큼 상쇄하여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광의의 개념으로 더욱 널리 쓰인다.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몇몇 기업은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를 선언하기도 했다. 탄소 네거티브란 현재까지의 배출량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실질적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탄소중립보다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탈탄소화

Decarbonization

에너지 생산·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하고 배출량 제로(0)로 나아가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이 탄소배출을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과 함께 핵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BAU

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온실가스의 총량 추정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30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의 경우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2030년에 배출될 온실가스 총 배출량 추정치를 나타낸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30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한다.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대기로 배출하기 전에 포집한 다음 압력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 해저 또는 지하에 저장하거나(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활용하는 기술(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을 총칭한다.

1. 주요 용어

ESG 채권

대표적인 CCU 기술로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반응을 활용해 수소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에탄올·메탄올 등 화학산업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이 있다.

환경, 사회, 지속가능성 등에 해당하는 사업 및 프로젝트에 한정해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을 통칭한다. 사회책임투자(SRI)채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크게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 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으로 구분된다. 한국거래소는 ESG 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사회책임투자채권 세그먼트를 오픈하기도 했다. ESG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에서 제정한 녹색채권원칙(GBP)과 국제기후채권기구(CBI)에서 개발한 기후채권표준(CBS)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자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사전검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ESG 채권 발행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ESG 채권 발행액은 58조 9000억 원, 글로벌 발행액은 약 560조 원에 달한다.

녹색채권 Green Bond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친환경 관련 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어 녹색산업을 분류하는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다. 글로벌 ESG 채권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사회적 (가치) 채권 Social Bond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거복지,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이 목적이다. 특히 초창기 국내 ESG 채권은 주택금융 공사,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등 공기업에서 발행한 사회적 채권이 주를 이뤘다.
지속가능채권 Sustainable Bond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녹색채권과 사회적 채권의 성격을 융합한 특징을 가진다.

PCR
Post-Consumer Recycled

소비자가 사용한 후 버린 제품의 원재료를 다른 자재 생산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재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매립지에 폐기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생 플라스틱이 대표적인 PCR 제품이다.

Triple Bottom Line

1994년 존 엘킹턴(John Elkington)이 제안한 새로운 회계 개념으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정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측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논의 및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최근 ESG 관련 비재무정보 측정 표준화 및 회계기준에의 반영 논의의 배경이 된 개념이다.

2. 이니셔티브 및 기관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파리기후변화협약(2015) 당시 모든 당사국에게 제출을 요구한 중장기 탄소 감축 전략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은 2020년 12월 제출했으며, 5대 기본 방향으로 ▶전기·수소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 연계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순환경제 이행 ▶자연·생태 탄소 흡수 기능 강화 등을 담았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C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 국가가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자발적인 감축 목표이다.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6개 분야를 포괄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제시했으며 2025년까지 목표를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기후 채권기구

CBI : Climate Bonds Initiative

2009년 영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다. 채권 시장을 움직여 지속가능한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투자자 이니셔티브다. 이를 위해 기후채권 표준(Climate Bonds Standards)을 개발하고 부문별 녹색 채권 발행기준을 제공한다.

기후채권표준 Climate Bond Standards

채권이나 기타 채무상품이 녹색채권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준이다. 녹색채권원칙(GBP)과의 연계를 토대로 자금사용 및 추적, 보고에 대한 명확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저탄소 및 기후적용 프로젝트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독립된 검증 및 인증체계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국제항공탄소 상쇄감축제도

CORSIA :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국가별 탄소배출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항공운송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2016년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합의한 계획이다. 순배출량을 2019년 기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는 초과한 탄소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매해 탄소배출량을 상쇄해야 한다. 2021~2023년은 시범단계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2021~2035년까지 총 25억 톤 감축을 목표로 한다.

그린 뉴딜

Green New Deal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으로부터 전환하고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최근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각국 정부는 지구 온난화를 심화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전기차, 수소에너지 등 에너지 청정화를 촉진하고 있다.

한국판 그린 뉴딜

2020년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다.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형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며,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2. 이니셔티브 및 기관



글로벌탄소 프로젝트

GCP : Global Carbon Project

2001년 결성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국제 과학계와 협력해 인간 활동이 배출하는 탄소와 지구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GCP는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와 각국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GCP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2020년 탄소 감축량은 26억 톤으로, 1900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로, 전 세계 3,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PCC의 핵심 역할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정책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다. IPCC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부 간 협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제2차 평가보고서(1995)는 교토의정서(1997)의, 제5차 평가보고서(2014)는 파리기후변화협약(2015)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



녹색금융협의체

NGFS :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글로벌 협의체로, 2017년 12월 설립되었다. 기후 리스크가 정부 및 금융기관의 금융안정성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여 권고안과 가이드를 마련한다. 또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 및 저탄소 투자를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만 가입하였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입 검토 중이다.

녹색분류체계

Green Taxonomy

친환경 산업 및 금융 활동의 정의를 제공하는 기준이다. 명확한 정의를 통해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2020년 EU에서 택소노미 초안이 마련됐고, 2022년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EU의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 리스크 완화 ▶기후변화 리스크 적응 ▶수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물질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 등 6개 분야로 산업을 구분한다. 한국에서는 2021년 상반기 환경부 주도로 K-Taxonomy를 마련할 방침이며, 녹색금융 공사(가칭)가 녹색 산업 및 금융 전반을 전담할 예정이다.

비재무정보 공개지침

NFRD :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2014년 EU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를 담았다. 2018년부터 역내 500인 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과 공익법인인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에 따라 환경문제, 이사회 다양성, 인권, 반부패 등 다양한 ESG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ESG 관련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2021년 3월 개정안 발표가 예정돼 있다.

2. 이니셔티브 및 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제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 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등 14개 발전사가 해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에코바디스 EcoVadis

공급망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2007년 설립됐다. 협력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CSR 일반 ▶환경 ▶노동 관행 및 인권 정책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 ▶지속가능한 조달 5가지 분야에 걸친 39개의 질문에 대해 평가한다. 2020년 75,000개 이상의 기업이 평가받았다.

유럽 그린 딜 European Green Deal

EU 집행위원회에서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 발표한 정책 로드맵이다.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U 경제의 전환을 위해 채택됐다.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의 탈탄소화, ▶신산업 전략, ▶지속가능한 운송, ▶건축분야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및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유럽 그린 딜 하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제정을 제안·심의하였고, 2022년까지 녹색회계 기준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기후법 European Climate Law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안으로, 2020년 기후중립 달성이 골자다. 2020년 3월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된 후 10월 유럽의회 심의에서 채택됐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1990년 대비 60% 감축) ▶역내 모든 회원국의 2050년 기후중립 달성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2023년까지 역내 모든 직·간접적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등이 담겼다. 2021년 1월 현재 마무리 합의 단계에 있으며, 올해 유럽 기후법이 통과되면 탄소국경세 등 관련 기후규제 입법안이 연이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청정 수소연합

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

2020년 7월 EU 집행위원회에서 결성된 협의체로, 유럽 지역 내 기업 및 금융기관 200개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유럽 수소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연합체로 2030년까지 저탄소 및 신재생 수소 생산 등 수소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됐다.

2. 이니셔티브 및 기관



유엔기후 변화협약

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5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197개국이 비준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 이행에 관한 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교토의정서(1997), 파리기후변화협약(2015)이 차례로 채택됐다. 협약 당사국은 매년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한다. 2021년 11월 영국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예정돼 있다.



유엔지속가능 발전목표

UN SDGs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약속이다.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에서 비롯됐다.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개 영역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한다.

적도원칙

Equator Principles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2003년 국제금융공사(IFC)와 세계 10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KDB산업은행에 이어 2020년 신한은행이 가입했고, 우리은행, KB국민은행이 가입을 추진 중이다.

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

SFDR :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2018년 3월 EU가 발표한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금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 규제다.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투자로 민간 자본을 유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ESG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 환경·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 규모, 환경·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당초 역외 투자자까지 SFDR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있어 현재 논의 중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1992)	교토의정서 (1997)	파리기후변화협약 (2015)
채택	1992년	2008~2020년	2021년~
목적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공약기간: 1차('08~'12), 2차('13~'20)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제한
주요 내용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에 다른 종류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 부과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모든 국가 (선진국 및 개도국)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체제
국가 분류	Annex I, II (선진국) Non-Annex I (개도국)	선진국 37개	협약 당사국 195개

2. 이니셔티브 및 기관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SSB :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2020년 9월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은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협의문서(Consultation Paper on Sustainability Reporting)’를 통해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제정을 위해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SSB) 창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SSB의 창설, 운영, 표준 제정 접근방법에 대하여 2020년 10~12월 동안 전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2021년 SSB를 출범시켜 ESG 회계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탄소회계금융 협의체

PCAF :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2015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협의체다. 기업 대출 및 투자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평가하고 공개하기 위한 회계 방법론을 개발한다. 전 세계 약 100개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가입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도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있다.

파리기후 변화협약

Paris Climate
Change Accord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2016년 11월 발표되었고, 2021년 1월부터 적용됐다. 195개 모든 당사국에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는 첫 기후합의로, ▶장기목표 ▶감축 ▶시장 메커니즘 도입 ▶이행점검 ▶재원 ▶기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C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나아가 1.5°C 이하까지 억제되도록 글로벌 차원의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당사국이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2020년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해 이행을 점검한다.

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

2020년 12월 출범한 글로벌 30대 자산운용사들의 협의체로, 9조 달러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 LGIM(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스위스 UBS 등은 모든 자산군에서 2050년 혹은 그 이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et-Zero Asset Owner Alliance

UN PRI(유엔 책임투자원칙)와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가 공동 주관하는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그룹으로, 2019년 출범했다. 보험사 알리안츠그룹, 프랑스 예금금탁금고(Caisse des Dépôts) 등 가입한 30여 개의 기관투자자들은 2050년까지 자사 포트폴리오의 넷제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

2018년 엘렌 맥아더 재단과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공동으로 출범시킨 이니셔티브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과 이로 인한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월마트·네슬레·유니레버 등 글로벌 기업과 NGO, 국가 및 지방정부, 투자자 등 45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OECD 기업 지배구조원칙 (2015)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투자활동 지원과 기업의 이익창출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1999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2005년에 이어 2015년 개정되었다. 주주권 및 주주평등, 기관투자자 및 주식시장, 이해관계자, 공시와 투명성, 이사회의

2. 이니셔티브 및 기관

책임 등으로 구성됐다. 글로벌 기준으로서 유효성이 입증된 여러 국가에서 지배구조 개혁 관련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의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긍정적 영향을 제고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1년 OECD가 제정한 모범적 행동규범이다. 한국 등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해 총 48개국이 수락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수락국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를 통해 홍보 및 이행 문제를 다룬다. 정보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소비자 보호, 경쟁, 조세 등 광범위한 기업윤리 분야를 포괄한다.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는 2017년 9월 공식 출범한 국제 이니셔티브로, 녹색경제 분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2개국 정부와 C40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자원연구소(WRI)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파리기후변화 협약 이행 가속화, 녹색경제 관련 5대 중점 분야(▶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식량/농업)에서의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5월 한국에서 제2차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ESG 관련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산업 연합이다. RBA의 전신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로, 2004년 전자산업 내 이니셔티브로 출발했다. 현재는 전자산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150개 이상의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ILO(국제노동기구) 선언,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의 인권 기준에 근간을 두고 있다. 평가 기준인 RBA VAP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에서의 CSR 달성 여부, 근로자의 작업 조건, 운영 과정에서 인권과 지속가능성 고려 여부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플래티엄-골드-실버 순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행동규범(Code of Conduct) 7.0 버전이 적용되고 있다.



RE100

Renewable Energy 100%

2014년 영국의 글로벌 비영리기구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이 시작한 글로벌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로,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와 연합해 탄생했다. 2050년까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 28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가입했으며, 한국에서는 2020년 11월 SK그룹 8개사가 최초로 가입했다. 정부는 2021년 RE100을 국내 실정에 맞춰 도입하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 이니셔티브 및 기관



SSE Initiative

Sustainable Stock Exchanges Initiative

각국의 증권거래소가 상장법인의 ESG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지속가능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UN에서 시작한 이니셔티브다. 2009년 반기문 UN 사무총장 주도로 발족했으며,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UNGC, UNEP FI, UN PRI가 공동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2021년 현재, 전 세계 100개 거래소가 참여하며, 한국거래소는 2015년 20번째로 가입했다. SSE 이니셔티브는 GRI, IIRC, SASB 등을 활용해 각국 증권거래소의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 수립을 지원한다. 현재 전 세계 105개 증권거래소 중 한국(21년 1월 발표)을 포함해 56곳에서 명문화된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을 제공한다.



The Investor Agenda

파리기후변화협약 달성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1.5°C 기후행동’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주요 기관(AIGCC*, CDP, CERES*, IGCC*, IIGCC*, UNEP FI, UN PRI)이 공동 발족했다. 투자(Investment), 기업관여(Corporate Engagement), 투자자 정보공개(Investor Disclosure), 정책 옹호(Policy Advocacy)의 4개 중점 분야에서 투자자 및 금융기관이 취할 수 있는 기후행동 조치를 제시하고 이행을 촉구한다.

*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VBA

Value Balancing Alliance

ESG 측정 및 화폐화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기업 연합체로, 2019년 출범했다. 독일의 BASF가 회장사, SK와 노바티스가 부회장사를 맡고 있고, 도이치뱅크, 보쉬, BMW 등 글로벌 16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한다. 또한 4대 글로벌 회계법인, 경제기구(OECD·세계은행),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등이 협력기관으로 활동 중이다. 2020년 10월, 온라인 세미나 ‘Value Balancing Alliance 2020 Korea’를 개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이 기업 활동의 환경 영향을 회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녹색회계(Green Accounting)’ 프로젝트를 수주해 진행하고 있다.

ZWTL

Zero Waste To Landfill

미국 최초의 안전규격 인증기관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이 폐기물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한 폐기물 관리 인증 제도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 활용하여 폐기물 배출량이 0으로 수렴하는 순환경제를 목표로 한다. 폐기물의 총 중량에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폐기물의 중량을 빼 재활용률을 수치화하여 기업의 자원 재활용 수준과 사업장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수준을 등급으로 평가한다. 재활용률이 100%일 경우 가장 높은 플래티넘, 95~99%는 골드, 90~94%는 실버 등급이 부여된다.

0~9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88
2050년 탄소중립	65

ㄱ	
공급망	60
교토의정서	9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88
국제기후채권기구 (CBI, Climate Bonds Initiative)	88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89
그리드 패리티 (Grid Parity)	76
그린 뉴딜 (Green New Deal)	89
그린스완 (Green Swan)	76
그린워싱 (Greenwashing)	76
글로벌탄소프로젝트 (GCP, Global Carbon Project)	90
기후금융	54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90
기후중립 (Climate Neutrality)	76
기후채권표준 (Climate Bond Standards)	88

ㄴ	
네거티브 스크리닝	24, 70
넷제로 (net zero)	76
녹색금융 (Green Finance)	81, 90
녹색금융 추진계획	65

녹색금융협의체 (NGFS,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90
녹색분류체계 (Green Taxonomy)	91
녹색채권 (Green Bond)	86
녹색채권원칙 (GBP, Green Bond Principles)	86

ㄷ	
다보스 매니페스토 2020	78
다보스 어젠다 2021	51

ㄹ	
비재무정보공개지침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91

ㅁ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Social Impact Bond)	77
사회적 (가치) 채권 (Social Bond)	87
생물다양성 발자국 (Biodiversity Footprint)	57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COP15)	57
설리번 원칙 (Sullivan Principles)	77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78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58, 70, 79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PS 제도)	92

ㅇ	
에코바디스 (EcoVadis)	92
여성 임원 할당제	6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64
위장환경주의 (Greenwashing)	76

유럽 그린 딜 (European Green Deal)	92
유럽 기후법 (European Climate Law)	52, 93
유럽청정수소연합 (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	93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94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	52, 94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95
이사회 다양성	59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78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51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ing)	79

ㅂ	
적도원칙 (Equator Principles)	95
전 과정 평가 (LCA, Life Cycle Assessment)	81
주주 자본주의 (Shareholder Capitalism)	78
주주참여 (Shareholder Engagement)	79
주주 행동주의	58
중대성/중요성 (Materiality)	79
지속가능금융 (Sustainable Finance)	81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 (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95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52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82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SSB,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96
지속가능채권 (Sustainable Bond)	87
지속가능투자 (Sustainable Investing)	24, 83

ㅋ	
(사회)책임투자 (SRI, 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82

ㄴ	
탄소가격제 (Carbon Pricing)	83
탄소국경(조정)세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83
탄소 네거티브 (Carbon Negative)	85
탄소누출 (Carbon Leakage)	83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84
탄소세 (Carbon Tax)	84
탄소중립 (Carbon Neutrality)	84
탄소회계금융협의체 (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96
탈석탄 선언	66
탈탄소화 (Decarbonization)	27, 85

ㄷ	
파리기후변화협약 (Paris Climate Change Accord)	96
포용적 자본주의 (Inclusive Capitalism)	78
포용적 자본주의 위원회 (CIC, Council for Inclusive Capitalism)	79
플라스틱 규제	56

ㄹ	
한국판 그린 뉴딜	89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	68
한국형 RE100 캠페인	65, 99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Modern Slavery Act)	60

A		G		N		T	
AccountAbility (어카운트빌리티)	16	GHG Protocol (Greenhouse Gas Protocol,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	12	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	97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21
B		Glass Lewis	39	Net-Zero Asset Owner Alliance	97	The Investor Agenda	100
BAU (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85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13	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	97	TNFD (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57
Bloomberg	30	GSIA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	24	O		Triple Bottom Line	87
C		I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2015)	97	U	
Capitals Coalition	38	ICG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	25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98	UNEP FI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Finance,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28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85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26	P		UNGC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유엔글로벌콤팩트)	22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31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	51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98	UN PRI (United Nations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유엔책임투자원칙)	29
CDP 공급망 이니셔티브	60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국제통합보고위원회)	19	PCR (Post-Consumer Recycled)	87	UNRISD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유엔사회개발연구소)	42
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17	IMP (Impact Management Project)	40	PDC (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 포트폴리오 탈탄소화 연합)	27	V	
Climate Action 100+	23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14	R		VBA (Value Balancing Alliance)	101
CRD (Corporate Reporting Dialogue)	18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41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99	Vigeo Eiris	37
D		K		RE100 (Renewable Energy 100%)	99	W	
DJSI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35	K택소노미	68	RepRisk	34	WBA (World Benchmarking Alliance)	43
Double Materiality	80	L		Responsible Sourcing	60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44
E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52	S		Z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스	61, 100	M		S&P (Standard & Poor's)	35	ZWTL (Zero Waste To Landfill)	101
ESG 채권	86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33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15		
EU Taxonomy	54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20		
F				SSE Initiative (Sustainable Stock Exchanges Initiative)	100		
FTSE Russell (FTSE4Good)	32			Sustainalytics (서스테이널리틱스)	36		



ESG Handbook **Basic**

발행일 2021년 2월 24일
발행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www.cses.re.kr
기획·집필 김슬기 (사회적가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집필·지원 이동현 (사회적가치연구원 Research Assistant)
정운채 (사회적가치연구원 Research Assistant)
집필·자문 박란희 (임팩트온 대표 & 편집장) www.impacton.net
김효진 (임팩트온 에디터)
박지영 (임팩트온 에디터)
제작 (주)더 디자인공간 www.dgonggan.com



본 보고서는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용지에
공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CSES

사회적가치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